광주시, 대한민국 최초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만든다

국정과제 채택…'미래형 복합신도시'

1조5천억 모빌리티도시 생태계 구축

연구용역 착수…올해 안 밑그림 완성

대한민국 최초로 로봇·드론 등이 일상이 되는 미래도시가 광주에 들어설 전망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공식 채택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혁신적 미래형 복합신도시 건설을 위한 것으로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 인프라와 인공지능(AI) 통합관제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복합 시범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제프리존과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실증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기본 교통수단이 되고 UAM이 하늘길을 열며 AI 로봇이 택배배송·생활지원 등을 담당한다.

모든 인프라는 AI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연결돼 교통체증 없는 최적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제공한다.

특히 직장(職)·주거(住)·여가(樂)가 하나로 연결되는 생활방식을 통해 출퇴근 개념이 사라지고 AI가 개인의 일정과 선호를 학습해 최적화된 생활패턴을 제안한다.

아침에 자율주행차가 개인 일정에 맞춰 자동으로 도착하고, 업무 중 필요한 자료는 드론이 배송하며, 퇴근 후에는 UAM으로 도시 상공을 통해 이동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시범도시 내에 주거·문화·휴식 기반시설을 갖춰 일과 삶이 공존하는 첨단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개발(R&D) 연구소·모빌리티 솔루션 기업·AI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AI 인프라 접근성, 미래차산업 연계성, 교통 편의, 주거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2억원 규모의 사전 기획연구를 착수하고 올해 안에 밑그림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에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으로 2028년 착공, 2030년 말 준공이 목표다.

건축, 도시계획, 도로, 자동차, 로봇, 물류, AI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기업 수요 반영, 실증 규제 발굴, 모빌리티 친화적 인프라 설계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제조업, 물류 등 산업에 AI를 접목, 생산성을 높이는 피지컬 AI 미래차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이라는 산업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피지컬 AI 기반 미래차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용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도시 인프라와 산업부의 제조업 피지컬 AI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계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미래 모빌리티 대표 도시를 구축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 AI를 선점한 광주에 미래도시인 AI 모빌리티 신도시가 건설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정과제 반영 및 사업 추진은 국토부가 광주의 어젠다를 국가정책으로 공식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오늘은 우리가 광복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17일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백범기념관에서 열려 '백범 오징어게임'에 참가한 시민들이 광복군 복장을 하고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전남 핵심 현안 국정과제 대거 반영 환영"

국립의대 설립 등 각계 릴레이 환영 성명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전남 핵심 현안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대거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을 공식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17일 "전남 의대 설립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성과는 전남도와 지역사회, 도민이 오랫동안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온 결과이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향한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빚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또 "전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준 정부와 그동안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허정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정과제 반영이 전남의 의료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도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의대 설립과 RE100 산단 등 전남 주요 핵심 사업이 반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전남도 국립의과대학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도민과 향우민의 간절한 희망을 잊지 않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반겼다.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전남도 국립의과대학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 고문)도 "1천300만 호남 향우와 함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국정 추진과제와 지역공약이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되며 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시원 기자

이병훈 前 의원, 내달 6일 토크콘서트

'지방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출간

이병훈 전 국회의원이 오는 9월6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지방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출판기념회를 겸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지역 수석부위원장에 내정됐다.

이 전 의원은 행정관료(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21대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등을 역임했다.

이병훈 전 의원은 "당초 '지방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책을 올해 4월 출판할 계획이었으나 조기대선, 민주당 당대표 선거로 인해 미뤄졌다"며 "책은 광주를 중심으로 지방과 대한민국을 리모델링하자는 취지에서 발간했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우여곡절 끝 광주시의회 예결위 재구성

조석호 위원장·이명노 부위원장

민주 윤리심판원 징계여부 촉각

광주시의회가 '예결위원 총사퇴' 사태 끝에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후임 위원 보임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남아 있어 정치적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존 예결위원 9명의 사임안을 처리하고 후임 위원 8명을 새로 보임했다.

이번에 보임된 의원은 안평환·박희율·이명노·서용규·박필순·심철의·조석호·홍기월 의원이다.

시의회는 사퇴 의원들의 수적 공백을 고려해 예결위 인원을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축소했다.

예결위원들은 본회의 직후 간담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석호 의원, 부위원장에 이명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조석호 신임 예결위원장은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곳에 아낌 없는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